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과 이슈

A Study of Digital Divide Issues

강신원(S.W. Kang) 통신경영연구팀 선임연구원

급격한 정보화 진행과 함께 계층, 소득, 지역간의 정보격차가 심화되고 있으며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정보격차 문제가 점차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따라서 정보화의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정보격차의 피해를 극소화시키는 정책이 요구된다. 이러한 정보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한 요건으로는, 모든 사람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편적 정보 서비스 확대, 인터넷 접속비용 및 재정지원을 통한 정보접근능력 강화, 교육 및 인식의 제고를 통한 정보이용능력 향상 등을 생각할 수 있다. 한편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면서 어떤 정책을 가장 효율적으로 결정하고 실행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이슈일 것이다. 그러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슈로는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을 투자로 보는 인식의 전환, 정보격차를 해결하기 위한 인간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 정보격차의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해결하기 위한 통계자료 확보 및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충분한 자금확보가 요구된다.

I. 서론

정보통신산업과 정보기기의 보급의 급속한 확산과 함께 계층, 소득, 학력, 연령, 지역간 정보 격차가 점차 심화되고 있다. 정보화 추진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소위 정보격차(digital divide) 문제는 처음으로 제기한 미국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나라에서도 점차 국가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정보격차 문제가 새로운 사회불평등 문제로 대두되는 이 시점에서 선진 각국의 정책적 노력도 더욱 강화되고 있다. 이는 정보화사회가 일부 특권계층의 사회가 아니라 “모든 이를 위한 정보사회”라는 인식에 바탕을 둔 것이며 사회복지 차원의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국가경쟁력 확보차원에서 그 중요성이 증가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현재 UNESCO, UNDP, OECD, ITU 등 국제기구에서는 물론 국제회의에서도 이러한 정보격차 문제

의 심각성을 논의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1].^{1),2)}

특히 2000년 1월 27일 개최된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에서 찰스 슈밥 회장은 인터넷 격차 문제를 거론하는 한편, APEC에서도 지식기반산업 발달에 따른 IT 분야 육성 및 정보격차 해소과제를 중점과제로

1) UNDP는 1999년 7월 “인간 개발 보고서(Human development report)”를 통하여 인터넷의 급속한 보급과 정보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정보격차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접속성, 공동체, 정보활용능력, 콘텐츠, 창의성, 협력, 자금지원 등 총 7개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OECD는 ICCP의 각 연구반을 통하여 회원국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인터넷접속 요금 구조, 보편적 서비스 등 통신인프라 및 서비스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으며, ITU는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부의 역할, 자금조달 방법 및 정보인프라 구축방안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다.

2) 정보격차는 OECD 국가들에서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으며, 2000 G8 오키나와 회의에서도 정보격차 및 정보기회(Digital Opportunity)에 관련하여 정부 또는 민간부문의 정책에 대하여 논의가 있었으며, 이를 반영하듯, 2001년 두바이 회의에서는 OECD 국가뿐만 아니라 30여 개국의 비 OECD 국가들이 초대되어 정보격차에 대한 논의 및 의견을 교환하기로 계획되어 있다.

선정하여 추진중에 있다.

그러한 가운데 정보격차 현상이 미래 정보화 사회의 계급적 격차로 고착화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점차 우세해지고 있으며 정보격차 해소에 대한 국가의 역할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즉, 정보 소외나 불평등의 문제를 지금까지와 같은 수요자 개인적 차원에서 극복해야 할 문제로 방치하기에는 그 정도가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격차 현상의 해소방안을 국가의 주요 정보정책 과제의 하나로 다루어야 한다는 것이다[1-3].

따라서 본고는 현재 심각해지고 있는 정보격차의 주요 이슈 및 국·내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과 우리나라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방향과 과제를 모색해 보기로 하겠다.

II. 정보격차 및 요인

1. 정보격차

정보화 확산과 보급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인터넷이며, 정보화를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는 서비스도 바로 인터넷이다. 인터넷은 정보통신기술의 혁명을 빠른 속도로 수용해 우리의 생활 형태를 변화시키면서 경제와 사회발전의 중요한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 이용의 패턴을 분석해 보면 지역, 소득수준, 성별 및 연령층의 정보격차가 점점 심화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1, 4]. 특히 UN 보고서는 “국가간 정보격차도 날로 심화되고 있으며, 그 한 예로 뉴욕의 인터넷 사이트가 아프리카 대륙 전체의 숫자보다 많을 정도로 세계적인 인터넷 빈부격차가 극심하다. 따라서 각국 정부는 인터넷 접속으로 삶이 크게 개선될 수 있는 사람들을 시급하게 인터넷에 연결시켜 정보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³⁾

인터넷이 가장 잘 발달했다는 미국에서 인터넷이 새로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사상 최악의 호황을 구가할 수 있게 한 원동력으로 꼽히는 인터넷이 무슨 문제가 될까 싶지만 실은 인터넷이 발달하면 할수록 심각한 사회적 갈등이 내연하고 있다는 게 미국 식자층의 우려이며 이것이 바로 “디지털 격차”라 할 수 있다[5].

앞으로 정보기술(IT)에서 뒤쳐질 경우 단순히 돈을 더 벌 기회를 놓치는 것 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존엄성마저 지키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현실이다. 즉 인터넷을 사용할 줄 모르면 사람대접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다.

실제로 미국에선 사회의 많은 부분이 인터넷으로 대체되고 인터넷을 통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들이 늘어나고 있다. 예컨대 숙제를 이 메일로 내고 이 메일로 받는 대학강좌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추세는 중·고등학교로 확산되고 있다. 대형식품·가정용품 체인점인 세이프웨이(safeway)는 모든 납품절차를 인터넷을 통해 처리한다. 은행거래와 세금 납부가 인터넷으로 가능해지고, 자동차 등록과 폐차도 인터넷으로 이루어진다. 이런 마당에 인터넷을 모르는 사람은 학업이나 사업은 물론 일상생활에서조차 심각한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다. 디지털 격차는 또 단순히 인터넷을 알고 모르는 것과는 다른 복잡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선 인터넷을 “안다는 것”과 “실제로 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다. 인터넷을 사용하려면 인터넷망에 접속이 가능한 컴

중 선언에서 “정보통신기술은 중요한 경제적·사회적 혜택을 주지만 동시에 국제간 또는 국내 소득 격차를 더욱 확대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선언은 또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접근과 이 기술을 이용하는 계층이 확대되지 않는 한 다수의 사람들, 특히 개발도상국의 국민들이 새로운 지식기반 경제의 혜택을 누릴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번 각료회의는 이러한 격차를 줄이고 개발을 지원하는 “디지털 기회”를 창출하는 방안을 권고하면서 예컨대 전자상거래에 대한 접근은 세계시장에서 무역의 기회를 증가시키고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UN은 전 세계 60억 인구 중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2억7천만 명에 그치고 있으며 인터넷 이용자의 90%는 선진국에 살고 있으며 또한 아프리카 대륙 전체보다 뉴욕이라는 도시 하나에 있는 인터넷 제공업체들이 더 많다고 지적했다.

3) 정보기술은 경제적 성장과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으나 이와 함께 정보기술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사이에 이른바 “디지털 격차(digital divide)”를 유발해 빈부격차를 증대시킬 수 있다고 UN 경제사회 이사회가 경고했다. 이사회가 발표한 최

퓨터가 있어야 한다. 즉 사용 가능한 컴퓨터가 없거나 있더라도 컴퓨터가 외부의 인터넷망에 접속되지 않고는 의미가 없다.

문제는 여기에 큰 격차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집에서 인터넷을 할 수 있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간의 “디지털 격차”는 장래에 회복할 수 없는 “학력 격차”와 “기술 격차,” “문화 격차”로 확대되고 결국은 심각한 “계층 간 격차”로 귀결된다. 아울러 인터넷의 속성상 세계화와 빈부격차 및 정보격차를 더욱 심각하게 확대할 가능성이 높으며 더 많은 정보 소외계층을 양산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1].⁴⁾

2. 정보격차 요인

정보기술의 발달은 사회 전반의 정보화를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변화에 모든 국민이 쉽게 적응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 결과 사회변화에 능동적으로 적응하여 그 혜택을 누리는 정보부자와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여 나오되는 정보빈자간의 정보불평등 문제가 촉발되고, 이는 정보사회의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정보불평등을 초래하는 요인은 다음과 같다[6, 7].

첫째 요인은 경제력이다. 정보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구매해야 하며, 지속적으로 통신비를 지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소득격차로 인하여 정보접근이 어려운 계층이 존재하게 되고 이에 따라 소득에 따른 계층간의 정보격차가 발생하게 된다.

둘째 요인은 지식 및 교육이다. 정보기술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교육이 요구되며, 정보의 효과적인 활용에 있어서 지식은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다. 인터넷의 경우 영어로 제공되는 정보의 양이 절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영어 실력이 인터넷 사용의 변수로 작용한다. 따라서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교육수준이나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정보로의 접근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의 정보격차가 벌어지게 된다[8].

셋째 요인은 정보화에 관한 태도와 인식으로 이것은 개인을 둘러싼 환경 요인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즉, 정보기술을 사용하지 않는 직업에 종사하거나 정보화 수준이 낮은 지역에 거주할 경우에는 정보화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정보화에 소극적인 태도를 갖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환경요인은 개인의 정보격차 확대에 주요 요인이 된다.

이 밖에도 연령, 성, 지역 등이 개인의 정보화 수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경제력, 교육, 직업, 거주지, 연령, 성 등 정보불평등을 초래하는 대부분의 요인들은 기존 사회불평등의 요인들과 동일하다. 결국 기존의 사회불평등 요인들이 정보사회에서는 정보불평등까지 촉발시켜서 사회불평등을 확대 재생산하게 된다.

III. 주요국의 정보격차 해소 정책

1. 미국

정보격차 문제는 지난 1998년 7월 상무부가 미국의 정보화 추진과정에서 심화되고 있는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차원의 정책적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기한 데서 처음으로 표면화되었다. 상무부의 정보격차 보고서(1999. 7)에 따르면, 현재 인터넷 인구는 1억 명을 상회하나, 저소득층의 인터넷 이용률은 고소득층의 1/20, 농촌은 도시의 1/2에 불과한 실정으로 정보격차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3, 5]. 그에 따라 상무부는 2000년 1월 5일 정보불평등 해소를 위해 지방정부와 민간단체에 총 1,250만 달러를 지원하는 한편, TOP(Technology Opportunity Program) 프로그램 지원을 강화하고 상무부 장관은 정보화 낙후도시를 순회하여 정

4) 특히 아프리카의 경우, 1999년 7월 현재 53개 아프리카 국가 중 50개 국가가 그 국가의 수도 정도에만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으며, 콩고, 에리트레아, 소말리아 등은 아직까지 인터넷이 보급되어 있지 않다. 아프리카 전 대륙에 걸쳐 인터넷 이용자 수는 1백만으로 추정되며 이는 영국의 1,000만 명에 비하면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다(<자료>: Mike Jenson, Association for Progressive Communications).

보격차의 심각성을 지적하였다. 아울러 클린턴 대통령은 지난 1994년부터 모든 학생들에게 정보활용 능력을 제공함으로써 정보격차 해소에 주력해 오고 있다.⁵⁾

특히 2000년에는 정보격차 해소를 국가 정보화의 최우선과제로 선정하고 이를 해결하는 데 정부가 주도하는 한편, 민간부문의 적극적인 참여를 추구하고 있다. 이미 1999년 12월 클린턴 대통령은 상무부, 교육부, 의료복지부, 주택도시개발부, 노동부 등에게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한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함으로써 정보격차 해소를 정책 최우선과제로 선정하였다. 그에 따라 정부차원에서 저소득자, 장애인 등 정보 소외계층이 인터넷 등 정보서비스를 쉽게 접속, 이용할 수 있도록 통신요금 등을 지원하는 E-Rate 계획을 추진하는 한편, 지역정보화센터 설립을 지원하고 있다. E-Rate 계획은 정보취약지역 주민의 정보이용 활성화를 위해 학교·도서관·의료기관의 정보서비스 이용시 부대비용의 20~90%를 정부가 보조해 주는 제도로 행정부는 1998년 말까지 총 17억 달러를 집행하였다. 또한 2000년 말까지 학교와 도서관에 총 62억5천만 불의 통신인프라와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보격차 해소 정책의 전담기관인 NTIA 역시 “Falling through the Net” 설문조사, TOP 프로그램(기존 TIIAP 프로그램), 가정의 인터넷 접근, 그리고 차세대 인터넷 개발에 역점을 두으로써 정보격차 해소에 총 9천7백5십만 달러를 배정하였다.

이러한 최근 미국의 정보격차 해소 정책은 정부 차원에서 전기·통신 등 공공재를 누구나 저렴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요금을 인하·면제하고 산간·농어촌 등 원격지의 인프라 확충에 주력하면

서 정보격차 문제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민·관간 공동 협력체 구축을 추진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⁶⁾

미국의 정보격차 해소 정책의 특징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첫째, 정보불평등 해소 정책의 강화이다. 1993년 NII에서 보편적 서비스의 확대가 명시된 이후 정보불평등 정책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였다. 그 결과 상무부의 정보화지원프로그램 명칭이 TIIAP에서 TOP으로 전환되었다. 또한 1999년 12월 9일에는 대통령과 상무장관, 민간기업,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정보격차회담(digital divide summit)을 개최하여 정보불평등 해소에 대한 행정부의 강한 의지를 표현하였다.

둘째, 보편적 서비스의 확대 정책이다. 저소득층 및 농어촌지역에 저렴한 비용으로 기본전화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학교, 도서관, 농어촌 의료기관의 인터넷 접속 비용까지 지원하고 있어, 보편적 서비스를 실시하는 나라 가운데 가장 그 지원 범위가 넓다. FCC는 2001년 1월 1일 이전까지 보편적 서비스 범위를 재검토하기 위해 Federal-State Joint Board를 소집할 것이므로 보편적 서비스의 범위가 더욱 확대될 것이다.

셋째, 정보불평등 해소를 위한 민간의 적극적 참여이다. 정보불평등 해소를 위해서 정부는 정보불평등 실태 파악, 정책의 방향 제시, 재정 지원, 그리고 관련 법 및 시행규칙의 제정만을 담당할 뿐 정보불평등 해소를 위한 실천은 시민단체, 지역기반의 교육 및 공공기관이 주로 담당한다. AT&T, Bell Atlantic 같은 통신회사, American Online과 같은 ISP, Microsoft사 같은 소프트웨어 회사, 그리고 Bill Gate가 설립한 Gates Foundation, Case Foundation, The Waitt Family Foundation 등 많은 민간기관도 정보불평등 해소를 위한 재정 지원을 하고 있다.

넷째, 경쟁과 자율을 통한 정보불평등 해소 사업자 선정을 들 수 있다. 정보불평등 해소를 위해 특정 사업자 및 기관을 지정하지 않고 경쟁과 시장기능에

5) 1994년 모든 교실과 도서관을 인터넷에 연결하는 학교정보화의 목표를 수립하고 모든 교실의 인터넷 연결, 첨단 멀티미디어 컴퓨터 보급, 양질의 교육용 S/W를 커리큘럼에 통합, 교사의 정보활용능력 육성 등 4대 정책에 대규모 재원을 투자할 것으로 공약하였다. 1996년 클린턴 대통령은 ‘Technology Literacy Challenge’를 발표하였다. 그리고 1994년 회계년도 2,300만 불에서 2000년 회계년도에 7억6천6백만 불로 교육기술지원(Educational Technology Funding)을 3,000% 증액하였다.

6) www.digitaldivide.gov 및 www.digitaldividenetwork.gov 참조

따라 사업자가 선정된다. 따라서 유럽처럼 특정 통신 사업자를 보편적 서비스 사업자로 지정하지 않으며, 정보불평등 해소를 위한 실무 역시 교육기관, 도서관, 박물관, 기초자치단체, 시민단체 등 다양한 기관들이 참여하고 있다.

다섯째, 다원화된 재정 지원 창구를 들 수 있다. 정보불평등 해소를 위한 재정 지원 창구 역시 단일화되어 있지 않다. 행정부의 지원도 FCC의 보편적 서비스 기금, 상무부의 TOP, 농무부의 DLTG, 교육부의 CTC 등 다양하게 있을 뿐만 아니라 민간단체들도 정보불평등 해소를 위한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보격차 해소 노력은 정보접근도 차이에 따른 소득 격차 심화가 계층·지역간에 새로운 갈등 유발요인으로 대두되고 있어 이에 대처하는 한편, 21세기 정보사회에 대비, 정보사용자의 저변을 확대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국가경쟁력을 제고해 나가기 위한 것으로 평가된다.

추후 미국은 초고속통신망 및 인터넷망 구축 등 총체적인 정보화 추진 노력을 강화하면서 국민들의 정보활용능력 제고를 위해 저가 인터넷 PC 보급, 학교·도서관 등 공공시설의 정보학습장 활용 등 정보화기반 확충에 주력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2. 영국

영국에서도 사회계층, 소득격차에 따라 정보격차 문제가 표면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정부의 직간접적인 정책적 대응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인구분포 면에서도 정보격차가 발생, 인구의 15%인 15세~24세 인터넷 이용자의 45%가 인터넷을 사용하는 반면, 총인구 1/5(19%)인 64세 노인 은 4%에 불과하다. 사회계층별, 교육수준, 직업, 기업규모 면에서도 이러한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즉, 최상위 계층(인구의 21%)의 경우 21%인데 반해, 최하층(인구의 29%)은 불과 7%가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6].

이러한 정보격차는 정보혁명이 진행되면서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영국의 인터넷 이용자 수는 매년 약 400만 명(총 인구의 8%) 정도 증가되며, 무료 e-

mail이나 무료 ISP와 같은 서비스 도입으로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특히, 저비용 터미널(Set Top Boxes, Table-top Webphone 등)의 활용, 디지털 TV(인터넷 접속수단인 PC 대응), 이동인터넷 접속(차세대 이동장비), 그리고 새로운 통신서비스(적정 가격의 always-on 접속) 등으로 서비스 질이 향상될 전망이다. 따라서 이러한 추세로 볼 때 2003년이면 영국의 인터넷 보급률은 자연증가율인 60%를 넘을 것으로 추산되어 다소 불균형이 해소될 지라도 상대적으로 접속하지 못하거나 소외될 시민은 약 2,0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Booz Allen Hamilton, Continental Research)[1].

한편 Booz Allen & Hamilton에 따르면, 개별적인 추진계획들이 공통된 비전과 틀과 부합되는 경우 가장 큰 파급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특정 정책안을 개발하는 데 있어 10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그와 함께 본 원칙에 의거하여 추진·실행되고 있는 영국 정부의 정보격차 해소 정책들을 분류하고 있다(〈표 1〉 참조)[6].

3. 일본

일본은 IT에 의한 사회경제 개혁의 진전에 의하여 인터넷으로의 액세스 및 정보통신기술의 진전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한편 취업, 교육, 지역활동 등의 사회경제 활동에 참가함에 있어서 그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정보격차의 방치는 새로운 사회적·경제적 격차의 확대로 이어져 나아가 사회의 안전성 및 경제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일본은 소득, 연령, 교육수준, 지리적 요인, 신체적 제약 요인 등에 의한 디지털 정보격차를 국내 및 국가(지역)간 양면에서 해소하여 모든 사람이 학교나 우체국 등의 공공시설을 비롯한 가정, 기업, 지역사회 등 모든 상황에 있어서 정보통신수단에 대한 액세스 기회 및 정보통신기술을 습득하는 기회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인터넷 등 IT의 혜택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하

<표 1> 10대 원칙과 정보격차 해소 주요 정책

원칙	Booz Allen이 제안한 추진계획	영국정부의 현 정책
적정 인터넷 접속요금을 위해 이용자와 근로자에게 재정적 또는 기타 인센티브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인, 장애인, 기타 소외계층을 위한 제품과 서비스 (장애인을 위한 특정 키보드 등) 설계 및 판매 기업에 인센티브 제공 적정 통신요금을 인하(5%) 정보격차 실태 조사와 더불어 인터넷 활용도 및 보급률 통계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든 이를 위한 컴퓨터(Computer for all): 빈곤지역의 중고 PC 활용 프로그램에 1,500만 파운드 투입 NOF 기금 활용: 지역 평생학습, 공공도서관 IT 학습센터, People's network programmes에 2억 파운드 지원
공공설비(취업센터, 도서관 등)를 통해 현재 경제적인 이유로 사용하지 못하는 계층에 인터넷 접근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서관, 취업센터, 우체국, 지방의회, 시청 등 공공장소에 저비용 인터넷 터미널과 같은 국가 인프라 개발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게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장비를 제공하는 하드웨어 대역 계획 추진 학교와 도서관들이 무료 또는 저비용으로 인터넷에 접속하도록 비용 보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양한 지역에 1,000개의 ICT 학습센터 구축에 5억 파운드 투입 경쟁정책을 통하여 BT, Telewest, Alta Vista 등에 정책요금제 도입 유도 공공도서관을 통한 하드웨어 대여계획(hardware lending scheme) 추진
인터넷 접속제고를 위해 모든 정부건물, 자산, 프로세스 재정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터넷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조치를 통해 취업센터를 'e-career Centres'로 전환 학교를 인터넷 접근장소로 전환 공공도서관을 e-libraries/Web Centres로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온라인 취업자문, 구직, 교육훈련 정보를 위한 취업센터에 'Workbank' 추진 City Learning Centres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학교에 IT 학습센터 구축
인터넷을 활용한 교육과정과 교재에 보편적 접근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훈련 제공기관과 노인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워크숍을 개최 홍보를 실시하는 기관에 보조금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기업 직원의 정보화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2000년 가을 산업대학 착수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E-missionaries' 임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사들에게 무료 인터넷 교육을 제공하고 이들이 다시 학생들과 지역주민에게 교육할 수 있는 동료들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사들에게 IT 교육훈련을 제공하기 위해 2억 파운드 복권프로그램 추진
수동적인 이용자들이 웹사이트 구축 또는 창업시 전자상거래를 할 수 있는 적극적인 이용자가 될 수 있도록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훈련비용을 제공하는 IT 전문가에게 보조금 지원 전자인증절차 등 전자상거래 법 제정 전자상거래 사이트 보안과 이용편리성 등급을 매기는 'Kite Mark' 신설 전자상거래 합법성을 보장하기 위해 스마트카드 인증시스템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자상거래법 의회 통과 2월 인증기구인 Trust UK 설립
재교육과 평생학습의 도구로서 인터넷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양방향 교육사이트를 통하여 실업자들에게 직업재교육 및 직업전환교육 실시 은퇴자 대상 직업전환교육 온라인 실시 웹을 통한 NVQ 과정 제공 기업교육훈련과 카운셀링서비스를 제공하는 웹 기반의 중소기업자원센터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취업센터에서 웹기반의 취업자문, 구직, 교육훈련 정보 제공 산업대학은 온라인 교육패키지 제공 2000년 3월 중소기업서비스의 온라인화
인터넷 활용 촉진을 위해 소비자들에게 재정 및 기타 인센티브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업, 주택, 장애, 생활비, 기타 수혜금을 인터넷으로 등록할 경우 1회 한정보너스 제공 온라인 납세 신청시 세금환불 인터넷 홍보를 위해 'National Internet Day' 등과 같은 이벤트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올해 개인에 10파운드 환불, PAYE와 VAT를 납세한 기업에 각 50파운드 환불(총합 100파운드) 업계와 협력 지속적인 국가홍보 캠페인 개최
정부가 모범이 되어, 보편적 접근을 확산하기 위해 시장에서 자기 역할을 최대한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든 정부조달을 인터넷으로 제공(NHS는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모든 의약품을 구매) 정보기술관련 연구지원을 위해 정부기금 조성 모든 정부서비스(여권, 자동차면허증, 사회보장번호의 인터넷 신청, 웹기반의 기업-정부간 거래 등)의 인터넷 제공 각 부처의 G2C, G2B 서비스를 통합된 웹톱 샵으로 제공하기 위해 민간업체와 협력 정부포털 사이트 구축 모든 정부업무(G2G)를 가능한 한 전자적으로 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럽 5차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을 통하여 사회통합적 IT 설계 협력연구에 정부지원(ESRC 프로젝트에 3년간 4백만 파운드 지원) OGO(Office of Government)가 주축이 되어 2001년 4월까지 정부조달의 90%를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정부의 '전자적 쇼핑물' 착수 정부서비스의 전자적 제공 목표 수립(2001년 25%, 2005년 50%, 2008년 100%)
영국의 인터넷 확산과 전자상거래 시장 발전에 저해가 되는 요인의 지속적 인 측정, 모니터, 그리고 대응방안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국의 온라인서비스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 분석 및 대처방안 수립 광대역 인터넷 접속시장(ADSL, 케이블모뎀 등)의 경쟁적 환경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자상거래 발전에 저해가 되는 요인을 산업별로 분석중 OFTEL이 현재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은 전자상거래 전략 보고서에서 명시

<자료>: 류석상(2000)

는 “디지털 기회(Digital Opportunity)사회”를 실현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시각을 가지고 정보격차에 대한 다음과 같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9].

첫째, 정보 리터러시(Information Literacy)의 함양이다. 전 국민이 최소한의 정보 리터러시를 갖출 수 있도록 학교교육, 사회교육, 기업내 교육 등 모든 부문에서 정보 리터러시 향상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전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21세기를 이어갈 어린이들에게 정보 리터러시가 읽기, 쓰기, 수학에 버금가는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고려할 때 교육의 정보화는 극히 중요하다. 밀레니엄 프로젝트로 되고 있는 “교육의 정보화”를 계속적으로 추진하여, “2001년도까지 모든 공립 초·중·고등학교에서 인터넷 접속이 가능하도록 한다. 2005년도를 목표로 모든 초·중·고등학교에서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고, 모든 학교의 각종 수업에서 교사 및 학생이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한다”는 목표를 차질 없이 실현될 수 있도록 추진중에 있다. 또한 사회교육, 기업내 교육에 있어 정보 리터러시 교육 촉진의 관점에서 시청, 구청, 우체국 등 지역의 공공시설 안에 인터넷 액세스 기능을 갖추어 누구든지 적절한 지도를 받을 수 있는 “IT 리터러시 센터”의 정비나 기업내 정보 리터러시 교육 촉진을 위한 세제혜택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

둘째, 정보 Barrier-free 사회의 고령화의 진전 및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을 배경으로 고령자·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가 등을 가능케 하는 수단으로서 고령자·장애인에 의한 정보통신의 이용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정보통신기기, 서비스 중에는 고령자·장애인의 이용에 대한 배려가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으며, 결과로서 정보통신 수단에 대한 접속이 제한되고 있다.

셋째, 텔레워크 및 SOHO의 보급 촉진이다. 텔레워크 및 SOHO는 통근부담, 육아 등의 요인으로 인해 종래 사회 참가의 기회가 제한되었던 주부, 고령자, 장애인 등의 사회참가를 촉진한다. IT의 혜택을 널리 향유할 수 있도록 사용하기에 무척 간편한 정보통신기기 등의 개발 촉진과 함께, 텔레워크 센터의

정비 촉진 및 텔레워크 및 SOHO용 감세조치 확대 등을 실시하여 지역의 텔레워크 및 SOHO 보급을 추진한다.

넷째, 지역정보화의 추진이다. 지역간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2005년을 목표로 광섬유망 전국정비 완료의 실현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실시함과 함께 휴대폰 등의 이용 가능범위의 확대, TV 등의 양호한 수신이 불가능한 지역의 해소 등 격차시정사업 및 시청, 구청, 병원 등의 공공시설로 고도 네트워크 도입 등 지방공공단체에 의한 모델사업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전국 어디서든지 고속 고품질의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기반정비를 실시한다.

다섯째, 21세기의 보편적 서비스 확보이다. 인터넷용의 고도 서비스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이를 보편적 서비스로 규정하는 것에 대한 국민적 컨센서스가 확보되어 있다고는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렇지만, 데이터를 중심으로 한 서비스의 중요성이 고조되는 가운데, 보편적 서비스의 범위에 대해서도 시대의 요구를 주시하면서 비용 부담 구조 등 보편적 서비스의 기본방향에 대한 국민적 논의를 재촉하는 것이 필요하다.

IV.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주요 이슈 및 정책

1. 정보격차 현황

우리나라의 경우, 정보의 접근에 관련된 것으로서 컴퓨터와 인터넷의 보급에 있어서는 연령, 교육, 그리고 소득별 보급률과 이용률에서 큰 격차가 존재하고 있다. 가구 당 컴퓨터 및 인터넷의 보급을 보면, 컴퓨터의 보급에 있어서는 연령별로는 20대가 51.4%로 50대 이상의 25.0%에 비해 2배 정도의 격차가 존재한다(<표 2> 참조). 교육수준별로는 중졸이 31.8%, 대졸 이상은 67.8%로 약 2.1배의 격차가 존재하며, 소득수준별로는 1백만 원 이하 소득계층이 35.3%, 4백만 원 이상은 87.8%로 약 2.5배의 격차가 존재한

다.⁷⁾ 본 조사 결과를 볼 때, 정보의 접근이 기초를 이루는 컴퓨터와 인터넷의 경우 연령이나 학력 그리고 소득에 따른 불평등이 존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10].

<표 2> 계층별 컴퓨터 및 인터넷 보급률 (단위: %)

구분		컴퓨터 보급률	인터넷 보급률
연령별	10대	61.2	13.5
	20대	54.1	19.6
	30대	45.8	10.8
	40대	60.6	11.6
	50대	38.7	6.7
교육 수준별	중졸	31.8	3.4
	고졸	45.6	7.6
	대학졸 이상	67.8	26.8
소득 수준별	1백만 원 미만	35.3	7.4
	1백~2백만 원 미만	49.0	10.5
	2백~3백만 원 미만	64.7	18.3
	3백~4백만 원 미만	80.0	35.6
4백만 원 이상	87.8	41.5	
전체	51.8	12.9	

<자료>: 유지열(2000)

한편, 정보접근의 차원에서 더욱 중요한 것은 실제 개인들이 이를 이용하는가의 여부이다. 따라서 개인별 컴퓨터와 인터넷의 이용에 따른 차이를 알아본 결과, 성별로 컴퓨터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약 1.6배, 인터넷은 2.5배 정도 많이 이용하고 있다(<표 3> 참조). 연령별로 컴퓨터의 경우 20대가 50대의 7.7배 이상을 이용하고 있으며, 인터넷의 경우는 20대가 50대의 26.8배를 이용하고 있다. 학력별로는 대졸 이상이 중졸에 비해 컴퓨터는 27.8배, 인터넷은 31.3배, 소득수준별로는 4백만 원 이상의 소득계층이 1백만 원 미만의 소득계층에 비해 컴퓨터는 2.8배, 인터넷은 4.1배 정도 많이 이용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성, 연령, 교육, 그리고 소득수준에 따라서 정보격차가 현격히 나타나고 있고 따라서, 정보통신기기의

7) 한편 인터넷의 보급률에 있어서는 연령별로 20대가 19.6%인 반면 50대 이상은 11.6%로 20대가 50대에 비해 약 1.7배 많으며, 학력별로는 중졸이 6.7%, 대졸 이상은 26.8%로 대졸 이상이 약 4배가 많으며, 소득수준별로는 100만 원 이하 소득계층이 7.4%임에 비해 4백만 원 이상 계층은 41.5%로 4백만 원 이상 소득계층이 약 5.6배가 많다.

접근 측면에서 볼 때 정보불평등은 이미 현실적으로 많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 계층별 컴퓨터 및 인터넷 이용률(1999년)

(단위: %)

구분		컴퓨터 이용률	인터넷 이용률
성별	여성	46.4	21.6
	남성	29.2	8.7
연령별	10대	66.5	24.4
	20대	54.7	26.8
	30대	34.1	12.2
	40대	20.1	7.0
	50대 이상	7.1	1.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2.3	0.4
	고졸	24.9	5.2
	대학졸 이상	63.9	31.3
소득 수준별	1백만 원 미만	24.1	8.3
	1백~2백만 원 미만	35.6	13.3
	2백~3백만 원 미만	48.2	20.9
	3백~4백만 원 미만	66.7	37.8
4백만 원 이상	68.3	34.1	

<자료>: 유지열(2000)

2.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가. 정보접근기회를 확충하기 위한 정보화 인프라 지원

정부는 2000년 6월 현재 5,041교(50.4%)에 구축된 학내전산망을 2000년 말까지 전국의 모든 초·중·고등학교에 인터넷 연결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고아원 등 사회복지시설에 중고 PC 1,000대를 보급하였으며, 10월부터 저소득층 학생 5만 명에게 PC를 무상으로 보급하기로 하였다[11].

그리고 2000년 8월부터 8개 먼 지역을 대상으로 한 “초고속인터넷서비스(ADSL)”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9월 중 도서벽지 우체국에 100개 위성인터넷 플라자 설치, 금년 중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지방사무소에 인터넷센터 2개소 설치 등 지역정보접근센터를 확충하기로 하였다. 또한 정부는 우체국에 지역주민들이 정보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장을 2000년 하반기까지 100개를 추가로 설치하는 등 관련시설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나. 저소득층 학생에의 무료 컴퓨터 보급·교육

정부는 가정사정이 어려운 초·중·고교생의 컴퓨터 활용교육을 고취하기 위하여 저소득층 자녀 50만 명에게 정보화 교육비 전액을 지원하고 우수학생 5만 명에게 무료로 PC를 보급함과 동시에 인터넷 사용료를 5년간 면제해 주는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아울러 1999년에는 1,000여 개의 컴퓨터학원과 협력하여 저소득층 자녀에게 무료 컴퓨터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100억 원을 투입하여 전국 7개 지역에 8개 교육장을 설치하고 저소득층 생활보호자, 청소년가장 등에 대한 소프트웨어 기술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전문능력 함양에 노력하고 있다[11].

다. 농어업인, 주부 등에 대한 정보화교육 확대

2000년 6월 말 현재 주부 21만 명, 군인 7만8천 명, 장애인 6천 명, 농어업인 1만8천 명 등 약 91만 명에 대한 정보화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기존의 정보화교육계획을 확충하여 2000~2002년간 “1,000만 명 정보화교육계획”을 수립(2000. 6)하였다. 또한 연말까지 총 300만 명에 대해 정보화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그리고 고용보험에서 근로자의 정보화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반기 중 제도 정비를 계획하고 있다.

라. 농어업인·장애인 등 정보화 취약계층에 유용한 콘텐츠 제공

2000년 4월부터 농림수산물정보망을 통하여 무료로 인터넷 정보서비스를 제공중이며, 향후 3년 이내 농업지식관리시스템을 구축 추진하고 있으며, 장애인 재활협회를 중심으로 내년 중 장애인 종합정보사이트를 구축하기로 하였다.

마. 고령자 정보화교육 추진

정부는 전체인구의 약 15%를 차지하는 인터넷 이용률이 낮은 55세 이상, 약 712만 명의 노년층을 대상으로 정보화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하여 지식정보사회에서의 소외현상을 최소화 해나가고 있다. 이

에 따른 구체적인 정책으로 정부는 공공 및 민간의 200여 개 컴퓨터 교육기관을 통해 2000년 7월부터 고령자를 대상으로 무료 컴퓨터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노인대상의 정보화교육과정을 위해 노인용 교재를 제작·보급하고, 2001년까지 약 10만 명 노인들에게 PC 기초활용 및 인터넷 이용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3.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주요 정책 이슈

정부는 앞으로 농촌지역의 정보 소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을회관 등의 공간에 초고속 통신망을 연결해 지역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방안을 가지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어 정책적 효율성을 기대하기란 어려운 점이 있다.

한편 정보의 사각지대로 분류되는 여성을 위해 지난 '98년부터 정보화촉진기금에서 매년 20억 원씩을 투자해 왔으며, YWCA 산하 “일하는 여성의 집”이나 여대 부설 교육원 등에 사업에 따라 1억 원에서 2억씩을 지원하고 있으나 실제 주부들의 정보화 욕구를 만족시켜 주기에는 아직 너무 미약한 수준이다. 특히 주부의 경우 정보 소외가 가장 심각한 데다 자녀들의 교육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고려해 좀더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하지만 아직까지 전체 정보화 교육예산의 2.3%에 불과하다. 군의 경우 국방부와 공동으로 150개 군부대에 정보화 교육장을 설치하고, 소년원에는 12개 정도의 정보화 교육장을 마련해 전역 및 출소 뒤 취업에 필요한 정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12, 13].

특히 장애인에 대한 정부 지원은 아직 걸음마 단계에 머물고 있으며 2000년 7월부터 2003년까지 매년 20억씩 주요 장애인 단체에 컴퓨터와 통신망 가설, 교육장 구축비 등을 지원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지만 점자 컴퓨터나 장애인용 키보드 개발사업 등 장애인을 위한 하드웨어 개발은 이제 시작단계라 할 수 있다.

정부가 정보 인프라 구축을 위해 1999년 10월 20일부터 시작한 인터넷 PC 보급 사업도 면밀히 분석해 봐야 할 단계이다. 이 사업은 기존의 어떤 사업

보다 새로운 시도였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나 소득 수준이 낮아 컴퓨터를 구입할 수 없는 계층을 겨냥한 정보 인프라 사업의 하나로 추진된 이 사업의 경우 당초 100만 원 미만의 저가에 36개월 할부혜택으로 1인 1 PC 시대를 열겠다는 계획으로 시작됐으나 실적은 부진한 상황이다.⁸⁾

또한 정부가 21세기를 내다보는 거시적 차원에서 인터넷 비즈니스 활성화와 CDMA 사업에 대한 집중투자 등 정보화의 산업적 이용 측면에 중점을 두고 있는 “사이버 코리아 21” 사업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보화 사회가 진척되면서 확대되는 정보불평등이나 양극화 등 정보격차를 줄이기 위한 고려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보화의 산업적 측면에만 치중하여 결국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작업은 또다시 집행 없는 정책으로 밀려날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 차원에서 정보 양극화 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사회의 정보불평등 문제에 대한 활발한 연구조사가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정보화를 국가경쟁력 강화 측면에서만 추진해 성별, 계층별, 소득별 정보 격차 등에 대한 연구가 구체화되지 않았으며, 정보불평등에 대한 분석 자료조차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정부의 정보 소외 문제나 소외계층에 대한 정보 양극화를 줄이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지원 사업의 종류와 대상, 형태 등을 선별하기 위해서는 정보불평등 문제에 대한 광범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V. 결론

현시점에서는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일이 국가 정

책적으로 매우 중요한 일이다. 정보화의 파급효과는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광대하며 개인, 기업, 정부의 효율성 제고 및 경쟁력 확대에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이러한 정보화의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정보격차의 피해를 극소화시키는 정책이 요구된다. 이러한 정보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한 요건으로는 모든 사람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편적 정보 서비스 확대, 인터넷 접속비용 및 재정지원을 통한 정보접근능력 강화, 교육 및 인식의 제고를 통한 정보이용능력 향상 등을 생각할 수 있다. 이를 위한 정책 방향으로는 첫째, 보편적 정보 서비스 확대이다. 보편적 서비스는 수익성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기본적인 정보이용환경을 차별 없이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오늘날에도 지역에 상관없이 인터넷 접속에 필요한 통신환경을 보장하는 것은 정보불평등 해소를 위한 출발점이 된다. 저소득층 및 농어촌지역에 저렴한 비용으로 기본전화 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학교, 도서관, 농어촌 의료기관의 인터넷 접속비용까지 지원하여 정보격차를 해소하여 기본적인 정보이용환경에 있어 차별을 없애는 중요한 조건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인터넷 접속비용 및 재정지원을 통한 정보 접근능력 강화이다. 이는 국민 누구나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보통신의 보편적 서비스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도 컴퓨터나 인터넷 접속요금을 부담할 수 있는 재정적 능력이 부족하다면 인터넷을 이용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계층을 대상으로 인터넷 접속비용 지원 및 컴퓨터의 보급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14, 15].

셋째, 교육 및 정보에 관한 인식의 제고를 통한 정보이용능력 향상이다.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용자가 정보에 접근하여 정보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보 소외계층이 정보의 중요성과 정보의 이용효과를 알 수 있도록 이들 계층의 인식의 변화를 유도하여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정보화사회 이행으로 발생하는 정보화 소외 계층과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것은 개인, 기업, 정부

8) 정통부는 “대기업 브랜드 선호하는 경향과 최고의 성능만을 추구하는 소비자들의 소비행태”를 판매 부진의 이유로 분석하고 있지만 국민들 사이에 퍼져 있는 품질에 대한 실망감과 애프터서비스에 대한 불안감이 더 근본적인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문제는 이러한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정책을 결정하는가 하는 것이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과제로는 첫째,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비용은 미래의 개인, 기업, 국가의 생산성 및 경쟁력을 증가시키는데 필요한 비용이므로 비용의 개념으로 접근하지 말고 투자의 개념으로 정보격차의 문제를 접근해야 할 것이다.

둘째, 정보격차는 정부의 힘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이므로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정보화를 촉진함에 있어서 민간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려고 노력하였듯이 정보불평등 문제해결에 있어서도 민간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요즘 취약계층에 대한 정보화 교육에 있어서 민간기관이 교육을 담당하고 정부가 이를 보조하는 형태의 협력방식은 매우 효과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정부는 정보 인프라 구축, 정보접근센터 설치, 정보이용교육 등 취약계층의 정보활용을 촉진하여 시장을 확대하려는 민간기업의 노력에 대해 각종 지원시책을 강구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정확한 정보격차의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기 위한 연구 및 통계자료 확보가 요구되고 있다. 정보격차에 대한 통계자료의 확보는 정보격차에 대한 문제의 인식과 보다 효과적인 정보화정책 입안에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향후 지식정보사회의 새로운 사회조사체계를 조기에 정립하고 정보불평등에 대한 실증적인 자료를 구축해 가야 한다.

넷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충분한 자금확보가 필요하다. 아무리 계획이 확실하더라도 안정적 자금

확보가 되지 않는다면 그 계획의 실현은 어려울 것이다. 특히 정보격차에 대한 투자는 그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사회 전반적으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안정된 자금을 조성하지 못하면 실효성 있는 정책대응은 기대하기 어렵다.

참고 문헌

- [1] OECD, "The Digital Divide: Enhancing Access to ICTs," OECD, Paris, 2000. 12. 7.
- [2] 강신원, ITU-D 회의결과 보고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000. 9.
- [3] 강신원, "ICCP WPTISP24 회의결과 보고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000. 5.
- [4] Sam Paltridge, "The Digital Divide, Internet Development and Pricing," OECD, 2000. 12. 7.
- [5] 조정문, "미국의 정보불평등 해소 정책 현황," 정보화동향분석 Vol. 7, No. 1, 한국전산원, 2000. 1. 31.
- [6] 류석상, "영국의 정보불평등 실태와 정책적 대응방안," 정보화동향분석 Vol. 7, No. 4, 한국전산원, 2000. 3. 15.
- [7] 강신원, "전자공간시대의 '네오 러디즘'에 대한 일 고찰," 정보통신동향분석, 1999. 5.
- [8] OECD, "ICT Skill Employment," Paris, 2000. 12.
- [9] 우정성, "디지털 정보격차에 대한 현상과 대응과제," 2000. 3. 29.
- [10] 유지열, "계층에 따른 정보불평등 심각," 정보화로 가는 길, 2000. 5., <http://webzine.info21.or.kr/>
- [11] 정보통신부, 2000년 정보통신에 관한 연차보고서, 2000. pp. 109 - 111.
- [12] 한국전산원, 해외단신, 정보화동향분석 Vol. 7, No. 6, 2000. 4. 15.
- [13] 정보화저널, "정보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 방향," 정보화저널 Vol. 7, No. 6, 한국전산원, 2000. 3. 30.
- [14] 강신원, "인터넷의 사회적 확산방안에 관한 연구," 사회정책논문집 Vol. 12, No. 1, 한국사회정책연구원, 2000. 6.
- [15] Sam Paltridge, "LOCAL ACCESS PRICING AND E-COMMERCE," DSTI/ICCP/TISP(2000)1, OECD, 2000. 3.